

12·3 내란 당시 전북지역 청사 폐쇄... 혁신당·지자체 대립

혁신당 “특검에 고발” VS 지자체 “강력 반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정도상 위원장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단과 당직자들은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청사 폐쇄 조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북도지사와 8개 시·군 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도상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공권력을 동원한 것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혼란과 시민 불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응이 헌법적 책무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한 채 비상 대응에 나섰다며 언급하며, 전북의 대응과 대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전북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도상 위원장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단과 당직자들이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조치, 중대한 사안 사태 이후 1년 넘도록 공식 사과 안해”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며, “위헌성이 제기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청사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해당 단체장들이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발과 달리 청사 폐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중앙정

부와 전북 지자체 간 사전·사후 교감 및 위압 여부 △직무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한편, 정도상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호 기자

김관영 지사 “도청 폐쇄 없었다... 이미 허위로 판명” 정읍·고창·부안 등 도내 기초지자체도 반박 나서

조국혁신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사가 폐쇄됐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시·군 단체장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지사가 “사실 왜곡에 근거한 선거용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전북도청은 폐쇄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을 다시 꺼내 들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청사 폐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시

간대에 도청 내부에서는 간부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약 3분의 1이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도 청사에 출입해 현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청의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통상적인 보안 기준에 따라 운영됐으며, 당일 역시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상황을 이유로 출입을 전면 통제하거나 청사를 봉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전북도의 공식 입장이다. 김 지사는 특히 “해당 사안은 지난 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

가 확인됐고, 청사 폐쇄 주장이 허위라는 점도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이를 제차 문제 삼아 고발을 예고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 당시 전북도의 대응을 상기시켰다.

그는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위헌적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며 “전북 도민과 함께 계엄 철폐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같은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지방정부와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적 공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조국혁신당의 이번 고발 예고는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전북 도민과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읍 완주, 임실, 고창, 부안 등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도 혁신당의 고발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도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만호 기자

“5극으로 나아가기 전에 전북 등 3특부터”

전북발전연합회, 정부 차원 구체적 지원 요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5극으로 나아가기 전에 3특부터 실질적으로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발전연합회(회장 최현양) 임원 10여 명은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3특에 포함될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광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현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순차적으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최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하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5극 구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3특에 포함된 전북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새만금 오픈

카지노 유치 △동부 산악권·남부권 균형발전 가속화 △프로야구단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전북은 전국 최대 수준의 농지와 평야를 보유한 대표적인 농도(農道)”라며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농성 명식푸드리서치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된 만큼 농업 관련 핵심 기관의 이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34년이 지났음에도 매립 공정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국제공항, 광역도로망, 항만, 대규모 전신전선 시설, 관광·국제회의장, 글로벌 복합리조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내 오픈카지노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 산악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무주에서 고창까지 이동하는 데 4시간이 소요되는 등 도내 생활권 연결성이 취약

하다”며 “기존 4개 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국도·지방도망을 확충해 도내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권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북 지역 프로야구단 유치도 건의했다.

연합회는 “전북은 3특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야구단이 없다”며 “프로야구단 창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유입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전북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가겠다”며 “5극을 향해 가기 전에 3특을 먼저 채워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발전연합회는 2년여 전 설립된 순수 자원봉사 민간단체로, 전북공당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만호 기자

평화경제특구 계획안 의결

통일부·국토부, 제3차 회의 열고 심의

전북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평화경제특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2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권희성 기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026년~20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권희성 기자

도·BNY,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임 박원주 대표와 신입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서봉균 대표는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이자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앞으로 전주

사무소를 직접 삼아 디지털·AI 기반 금융 협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국민연금 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며 “BNY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전북이 국제적 위상을 갖춘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호 기자

‘1차 농협 개혁’ 본격화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2차 농협 개혁도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협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아 농협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자산 500억원 이상 지역농협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준법감시기 제도 및 주요 임원 공개모집 원칙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농협의 동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을 3%로 인상해 농촌 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1차 농협 개혁’의 성과로 평가하며, 향후 농협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선거 근절을 위한 ‘2차 농협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정읍=김대환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